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5년 4~5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키다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수립·발표 -
- 5월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약 5.8만 명) 실시 -
-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등 처벌 강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대책 제목은 아동의 입장에서 정리

## 1.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리를 찾아주세요”

-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 의료정보(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를 절대지표로 활용하는 등 발굴 모형 개선

-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하여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하여 의무교육 취학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 2. 피해아동 보호·지원 “우리를 지켜주세요”

- 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 아동복지법 개정(2026. 2. 3. 개정, 2026. 8. 4. 시행)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시행 예정

## 3.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하여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 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똑똑!’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

\* 사업 참여 가족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비율은 3.1%로 전체 8.7%의 1/3 수준(24.)

#### 4. 장애아동 학대 대응 “우리의 다양성을 알아주세요”

- 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

\* 장애아동 학대 사례 700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608건(86.9%) (24.,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062. 아동학대대응과. 2026. 4. 22.

## II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으로 복지서비스 안내간편 신청금융정보 동의 절차 한 번에 해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복지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4월 24일(금)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 필요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 < 복지멤버십 개요 >

- (주요 내용)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
- (현황) 가입자 1,201만 명, 안내하는 복지서비스 163종('26.3월 기준)
- (안내 절차)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 ①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수급자격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
  - ② (가입 후 30일 이내)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
  - ③ (매월) 연령·수급자격 등 변동을 감지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

#### 1. 복지멤버십 카카오톡 확대로 복지정보 확인 편의성 제고

- 복지멤버십 관련 정보를 문자,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카카오톡에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채널을 추가하면 안내 사업 목록, 안내 절차 등 복지멤버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복지멤버십 가입이나 안내 방법 변경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 복지멤버십 안내 방법 〉

<b>현행</b>	▶ 복지멤버십 안내를 문자, 이메일을 통해 제공
↓	
<b>개선</b>	▶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복지멤버십 관련 정보 안내

## 2.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복지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복지포 누리집에 별도로 접속하여 안내받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안내 문자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복지포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신청 연계

### 〈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 〉

<b>현행</b>	▶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확인 → 복지포 누리집 별도 접속 및 로그인 → 안내받은 복지서비스 검색 → 온라인 신청
↓	
<b>개선</b>	▶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하단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클릭 →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3. 복지멤버십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복지멤버십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를 위해서 복지로 누리집에 별도 접속하여 본인의 정보를 수정해야 했다.

\* 복지멤버십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를 할 경우,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서비스 안내

- 앞으로는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하단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누리집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올해부터 금융정보등 제공을 동의한 가입자에 대해 연 2회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

#### < 복지멤버십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절차 >

현행	▶ 복지로 누리집 별도 접속 및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복지멤버십) 클릭 → 변경 신청 화면에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	
개선	▶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하단 “금융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후 변경 신청 화면에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

-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더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069. 급여기준과. 2026. 4. 23.

### III

#### AI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메운대! AI 대전환 통해 보건의로 난제 해결 모색

- 제1차 AI 기본의료 전문가 정책 간담회 개최 -
- 범부처 역량 결집한 「AI 기본의료 전략」 수립 위해 현장 전문가 목소리 경청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I)'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AI 기본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 임문영)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등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 현장 적용 방안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① AI를 통한 의료 취약지 공백 및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도의 진단 및 처방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② AI 대전환(AI)을 위한 정책적 과제: 데이터 표준화와 시스템 고도화

-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지·필·공 AI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와 정보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 특히, 병원별로 다른 의료데이터 형식을 통일하고 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병원 정보화 및 AI에 대한 명확한 유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 기초 발제에서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기본 의료 전략’ 기본 방향을 정립하였고, 범부처적 역량을 결집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 정부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료 AI 전문가, AI 개발 기업, 그리고 지방의료원 현장 의료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 이형훈 제2차관은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 의료체계의 오랜 난제인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102.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6. 4. 30.

## IV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 -
- 시장·군수·구청장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 지역별 인구 불균형, ▲ 가구 형태 다양화, ▲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 인구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시민사회·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정부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 소아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하여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는 소아응급 전문의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야간·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전국 148개소까지 늘린 바 있다.
-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 소아 심야진료 가산(2023년 11월~), ▲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수가 인상(2023년 11월~),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예산) 지원(2024년 1월~)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이번에는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였다.
-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소아 진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소아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 환자의 질병,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13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6. 5. 7.